

사설

###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많다

지난달 29일과 30일, MBC와 SBS는 각각 오는 13일과 25일을 기해 KT스카이라이프 제공되던 HD방송 송출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방송사가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KT스카이라이프 측의 계약불이행, 2009년 이후 2년 여에 걸쳐 양사 HD방송을 재송신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케이블SO가 지상파에 재송신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대우의무(타사와의 거래 조건과 비교해 동등조건을 유지할 것)를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MBC와 KT스카이라이프의 경우에는 지난 6일 열린 서울남부지법 조정재판에서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SBS의 경우도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MBC의 전례를 그대로 따를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번 사태를 두고 우리는 지난해 9월 케이블SO들이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고자 했던 상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케이블SO들은 지상파에 HD 재송신 대가를 지불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시청자를 볼모 삼아 '지상파 무료 재송신'이라는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여지를 부렸다. 거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전담반'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오로지 케이블SO의 입맛에만 맞는 정책들을 개선안이라며 지상파가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케이블SO들은 기고만장하여 재송신 비용 소송에서도 베팅 높음을 하는 상황까지 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KT스카이라이프가 MBC와 SBS에 HD송출 비용을 체불하는 상황은 케이블SO가 방통위를 등에 업고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을 흉내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최대대우의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쌍방간에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KT스카이라이프의 대응이 과연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주관적인 '해석'을 객관적인 '계약'에 앞

선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역지'에 불과하다. 이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신의 '입장'만을 실력으로 관철시키려 했던 케이블SO들과 똑같은 수준의 투쟁일 뿐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투쟁을 받아 주는 시누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방통위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방송 질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 기관이다. 그러나 지난 1기 방통위는 케이블SO들의 탈법적인 투쟁에 발 벗고 나서서 '의무재송신 확대'라는 딱을 쥐어주려는 모습까지 보였다. '의무재송신은 일단 확대하고, 비용문제는 차후에 해결한다'는 조건은 '비용을 지불하면 말던 지상파는 유료방송에게 콘텐츠를 고스란히 제공해야 한다'는 불평등한 요구이다. 말로는 '시청자의 시청권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라지만 근본적으로 방송질서를 바로잡지 못하는 정책이기에 이는 미봉책일 뿐이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의 재송신 비용 체불과 같은 상황이 또 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방통위가 KT스카이라이프와 지상파 방송사 간의 사적 계약에 끼어들어서 안되지만, 적어도 케이블SO와의 재송신 분쟁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들(법원의 판결과 계약 사실)을 근거로 원칙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제3, 제4의 재송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지상파는 우리나라 방송산업의 뿌리를 이루는 매체로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보편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지상파가 이와 같은 의무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수호받고,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돼야 한다. 이것은 무리한 요구도, 불필요한 혜택도 아닌 최소한의 권리행사다. 법과 계약을 통해 명백하게 누려야 할 권리마저 지켜지지 못한다면 더 이상 지상파의 설 자리는 없다.

## SBS 방송기술인협회, 방송현업기술세미나 개최

지난 29일 목동 SBS방송센터 13층 SBS홀에서 SBS 방송기술인협회(회장 김성훈) 주최로 '방송현업기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김성훈 SBS방송기술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의 방송기술 세미나는 주로 방송기술정책과 차세대 방송기술에만 치중했었는데 이번 세미나는 현업에 종사하는 방송기술인들에게 현장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회원 상호간 정보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기

획되었다"며 세미나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박정기 SBS 방송기술인협회 학술국장의 진행으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는 SBS 협회원뿐만 아니라 타 직군 종사자 및 지역민방 협회장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SBS 방송기술인협회는 세미나 직후 지역민방 협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민방방송기술인협회의'를 개최해 SBS 포함 민방방송 10개사와 정보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 KBS, 시민단체 대상 Korea-View 설명회 열어

KBS Korea-View (이하 '코리아뷰') 추진단은 지난 5일 KBS신관 국제회의실에서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KBS 김인규 사장은 "지상파 TV가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되면서 케이블·위성방송에 가입하지 못하는 전체가구의 약 20%(370만가구/960만명)에게 무료로 20여개의 다채널 방송을 제공하고자 하는 친서민 디지털 정책이 코리아뷰"라고 설명하고 "디지털 방송의 혜택을 저소득층 시청자에게 제

공할 수 있도록 입법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시청권 보장 차원의 정책이라는 의미에 대체로 공감하며 난시청 해소와 수신기 무상 지원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전국언론노조연합, 국민행동본부, 라이프코리아를 비롯한 다양한 성격의 시민단체에서 100여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 “재난방송 가이드라인 재정비해야”



국내의 재난방송은 여전히 선정성이 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재난관련방송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단국대 법학과

지성우 교수는 "최근 지진해일·원전 사고가 일어난 일본에서 NHK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질서정연한 모습을 주로 방영하는 등 국민단합과 재건의지에 초점을 맞춘 반면, 천안함·연평도 포격사건 등 국내 재난상황을 방송했

던 국내방송사들은 재난의 사회·구조적 측면보다 개인의 희생과 죽음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도 여과없이 보도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사의 선정주의적 보도, 한견주의적 보도, 황색 저널리즘이 부정확한 정보를 양산함으로써 확대해석·오인·편의적 해석 등 불안요소를 키우고, 결과적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킬 것"이라고 덧붙이며, 그 대안으로 언론의 자율성을 인정하되 재난상황에서 공익성과 공공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회적 통합 가능성 제고 △객관성과 정확성 준수 △피해자에 대한 배려 △사생활의 존중 △제한 법규의 준수 등 5가지를 재난방송 가이드라인의 요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 정호근 팀장

은 "방송사들의 재난방송 가이드라인을 조사해본 결과 재난방송 시 방송내용 구성과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만 있을 뿐 실무에서 활용하고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은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서울YWCA 전현숙 사무총장은 "일본 원전사고를 보도한 국내 방송사들의 보도를 모니터링한 결과 '재난 쇼'로 불려야 할 만큼 충격적인 장면들을 계속 내보내며 공포감을 조장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시청자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재난정보를 얻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해야 할 일은 상황을 냉철히 분석하고, 전문가를 동원해 심층적인 보도를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송사에서 직접 보도를 담당하는 이들은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공감하는 동시에 현장에서의 한계도 분명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 지상파 DMB도 유료화?

방통위는 지난 30일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DMB의 수익구조 개선, 관련 법·제도 합리화, 서비스 환경 개선을 통한 재난방송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지상파 DMB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 DMB는 이용자의 경제 부담이 적고, 재난방송 등 시청자 복지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취약한 수익구조와 모비일에 맞지 않는 규제 등으로 인해 현재 누적 적자가 832억원"이라며 "작년 말 기준으로 약 4,000만명의 이용자가 있어 서

비스를 중단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지상파 DMB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광고매출 부진이다. 현재 수도권 DMB 사업자의 월 평균 광고수입(2억원 수준)은 월 평균 운용비용(5억원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지역 사업자는 광고 수입 자체도 전무할 실정이라고 한다.

이에 방통위는 현재 지상파 DMB 이용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납부하고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상파

DMB 단말기 가격에 미리 일정액을 포함시켜 판매하는 방식, 기술개발을 통해 추가되는 채널에 대해 유료화 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방통위는 이달까지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7월까지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한 뒤 새로운 수익모델 도입방안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상파 방송과 마찬가지로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는 철학에서 출발한 지상파 DMB를 유료화하는 것은 지상파 DMB 철학에 어긋난다며 방통위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어 지상파 DMB 정책을 둘러싼 공방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방송장비에도 수요예보제 도입

방송장비 제조사의 생산전망 예측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요예보제' 도입이 추진된다.

지난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영규 방송통신융합실장, 지상파·케이블 TV·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사 CTO, 방송장비 제조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방송장비 활성화 간담회'에서 방송사 측은 "2011년 지상파·주요 SO·중편·위성방송 사업자의 방송장비 구매예정금액은 약 4,333억원이며, 앞으로 수요예보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방송사 측은 국내 방송장비 활성화에 대한 정부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 앞으로 수요예보제와 시험인증 규제개발 등 방송사 참여가 필요한 부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방송장비 업계는 "수요예보제 도입 논의는 환영할 일"이라며 "앞으로 정부와 방송사의 지원에 부응하기 위해 업체의 자생력을 키우고 자구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영규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은 "과거 통신장비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성공을 거두었듯이, 방송장비도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지원을 시작하여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한다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미디어랩도 공영성과 공정성 담보돼야”

### 미디어랩법안 제·개정

일시 : 2011년 4월 7일 (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



"방송의 공영성과 공정성이 추구하고자 하는 지적야 할 덕목이라면, 그의 하부구조인 미디어랩에서도 공영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

지난 7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미디어랩법 제·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김민기 송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방송광고와 관련된 미디어랩 논의도 방송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위

와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논의 중인 미디어랩 설립 방안에 대해서는 "완전 경쟁론보다는 '1공영 1민영' 체제의 제한 경쟁론이 방송의 공공성 유지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효율성 측면만을 강조한다면 완전 경쟁이 적합하지만 이는 시청자보다는 사업자 입장을 중시하는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제한 경쟁은 방송에 대한 자본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군소 방송사의 존

립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방송의 다양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방송의 공공성을 중시한다면 당연히 제한 경쟁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MBC도 공영 미디어랩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상파 방송3사의 광고수입 평균 점유율이 KBS 30%, MBC 45%, SBS 25%인데 KBS와 MBC가 공영 미디어랩에 속하면 공영 75%, 민영 25%가 되고, MBC가 독자적인 미디어랩을 운영하게 된다면 공영 30%, 민영 70%가 된다"며 방송의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MBC가 공영 미디어랩에 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표 MBC 연구위원은 "독일이나 프랑스 공영방송들도 미디어랩을 자회사나 계열사 형태로 소유하고 있다"며 "(MBC의 줄어든 이익이) 시청자 복지가 아닌 종합편성채널 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랩 논의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 ..... 연합회 동정 .....

- 한국나문서연합회장 이 · 취임식 참석 (3.30)
- 대구경북권 디지털 방송기술 교육 세미나 개최 (4.1)
- '방송과기술' 편집위원회 워크숍 (4.1~2)
- KOBAC컨퍼런스 정책회의, 5차 (4.3)
- DTV Korea 사무총장 미팅 (4.4)
- Google 본사 방문 및 NAB 참관 (4.7~17)

### 방송기술저널

창간 |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양창근  
편집주간 김성훈  
편집위원 김건희 서상원 장진영  
송주호 윤현철  
취재기자 백성하 강민수  
기획실 강동균  
인쇄인 은행나무  
주소 |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5층  
전화 | 02-3219-5635  
팩스 | 02-2647-6813  
트위터 | @KOBETA.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 광고문의

02-3219-5635

## KBS기술연구소, 연구개발논문집 창간



KBS기술연구소(소장 김태환)는 지난 30일, 연구개발논문집 "KBS R&D" 창

간호(계간)를 발행했다. KBS R&D는 국내외 방송기술관련 정기 연구논문집으로서는 최초의 사례이며, 3개월 단위로 KBS기술연구소의 자체 연구결과를 실게 된다. KBS기술연구소는 50여명의 연구인력으로 해외유수의 논문집(SCI급)에 1년 당 5편 정도를 게재하며 국내 학술 및 전문논문도 15편 이상 게재할 정도로 저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다.

김태환 연구소장은 "최근의 급격한 방송기술변화에 KBS가 신속하게 대응

하고 그 결과를 학술적으로 관리하여 방송업계의 전문인력과 심층지식을 공유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방송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논문지를 발간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KBS R&D는 최신기술동향, 연구 및 학술논문, 특허소개 등의 3가지 분야로 구성되며, KBS 각 부서 뿐만 아니라 국회 및 방송관련 정부부처, 방송 및 과학기술분야 공공기관 및 산학단체, 대학교, 연구소 등에 배포된다.